

경기도, IoT로 '실내미세먼지 제로화'

평택대 산학협력단과 MOU 체결
공기질 측정·자동관제시스템 구축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250개 센서



경기도청 전경. /경기

경기도는 20일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MOU를 체결하고, '2019년 IoT 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2019년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은 민선7기가 도민 제안을 받아 추진하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 공약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3억 원을 활용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IoT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내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의료원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도서관 등 5개 분야 국공립시설 50개소에 각각 5개씩(실내 4개, 실외 1개) 총 250개의 센서를 설치, 미세먼지를 상시 측정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도는 이날 MOU를 통해 평택대 산학협력단과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 ▲수탁사업자

선정 ▲설치 운영 등 행정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평택대 산학협력단은 ▲측정센서 설치 방법 및 적정 설치 위치 자문 ▲측정데이터 정밀 분석을 통한 '경기도에 맞는 실내공기질 표준관리모델제시' 등 연구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에도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현 평택대 산학협력단장은 "지금까지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중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실측자료가 부족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연구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ICT정보기술과 융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대기관리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익산시, 신청사 건립 본격화

타당성조사 의뢰... 행정절차 이행
재원부담 최소화 위한 다각적 검토



39,271㎡, 지하1층~10층 정도의 규모이다.

주차장은청사 부지 내 지하주차장 450대를 포함한 504대와, 별도로 2청사 주차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와 함께 시 소유 공유지의 수익모델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을 도시재생사업, 개별적 국비사업 연계 등을 통한 재정확보와 함께 익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이익 공유방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 등에서 안정적인 청사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청사건립기금 적립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하루 빨리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며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하여 청사건립에 따른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익산시(시장 정현울·사진)는 지난 1월 31일 신청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본격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했다.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행정절차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1월, 4월, 8월 3차례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될 익산시 신청사의 규모는 지난해 12월 5일 시민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본청 및 의회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연면적

장 부지에 265여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총 77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상부인 청사 전면 지상공간에는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하고, 청사 내에는 다목적홀, 시민회의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을 반영했다.

익산시는 올 하반기에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이후 설계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청사건립에 따른 재원부담

롯데백화점, 미세먼지 영향 청정가전 '불티'

의류건조기 80%·관리기 50% 매출↑
의류 관련 제품, 가전 시장 매출 주도

극심한 미세먼지 영향으로 가전 시장의 소비트렌드도 급변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의류관련 가전 매출도 크게 증가하며 가전 판도가 뒤바뀌고 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이 18년간 가전제품의 매출을 분석해 본 결과 미세먼지 관련 제품의 매출은 17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미세먼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홈케어 가전은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무려 100%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가전 시장의 필수 아이템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가습기 또한 4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 관련 가전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매출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옷에 묻은 미세먼지를 털어 관리해주는 의류관리기 매출은 전년대비 7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류건조기 역시 60%의 증가율로 가전 시장의 중요 소비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도 미세먼지 여파로 인한 관련 제품의 상황은 동일하다.



롯데백화점광주점 9층 디지털가전전문관에서 예비 신혼부부가 혼수준비를 위해 가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지역 롯데마트 1~2월 판매량은 의류건조기가 8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류관리기 50%, 공기청정기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의류 관련 가전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세먼지 관련 가전 제품이 시중에 한정되지 않고 연중 판매 특수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는 환경 변화에 따라 연중 지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젊은층 중심으로 의류관리기, 의류건조기를 사용해 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혼수가전의 주요 필수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또한 가전 시장 소비 트렌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롯데백화점광주점에서는 샌드위치 메이커, 토스터기, 라면포트, 미니믹서기 등 1인 가구에 적합한 제품을 확대 판매하는 추세이다.

롯데백화점광주점 임형욱 생활가전팀장은 "점점 더 환경이 악화되면서 미세먼지가 연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을 이젠 필수 가전처럼 인식하고 있어 가전 판도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의류 관련 가전제품 등의 매출 성장은 꾸준히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봉태영 기자



'2019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협약대출' 출시.

광주은행, 소상공인 지원 5억원 특별출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0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출연하여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2012년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보증대출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다. 가까운 광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후 1년간 광주시 2.5% 이자차액 보전으로 최저 0.86%~최고 1.20%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총 28억원을 광주시에 출연하여 5,710개 업체에 670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봉태영 기자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

개발행위허가 조항 중심 개정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공장 등의 개별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개발지역 주변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 내용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은 조례로 유도지역 요건(용도지역, 건축용도, 거리, 규모)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물의 분

산입지를 지양하고 집단화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집단화 유도지역이 급속하게 확장돼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집단화 유도지역이 폐지되면 공장 등의 건축 인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돼 입지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정립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 폐지된 규정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 관한 기준 폐지 도로 신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지정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구조물(옹벽, 석축 등) 높이의 산정방식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기타 폐지 및 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이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은 "그간 민선7기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T/F 운영 결과 및 시장 전략회의에 따라 공장 등의 개별입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함을 공감했고, 그 실천과제로 그간 난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목됐던 공장 등의 집단화 유도지역 관련 규정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21일 (목)
음력 : 1월 17일

수도권 날씨
-2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15 | 해질 / 18:17

연천 -8/8, 동두천 -5/10, 가평 -6/9, 파주 -8/9, 서울 -2/7, 양평 -6/8, 인천 -1/6, 수원 -2/6, 용인 -2/6, 평택 -5/8

백령도 1/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